

# 삼성전자 노사, '평상시 유지' 해석 충돌... 파업 변수 커졌다

법원, 가처분 4건 중 3건 인용  
안전보호·보안작업 유지 의무화  
노조 "주말·연휴 수준이면 충분"  
사측 "평일·휴일 모두 평시 수준"  
노조, 예정대로 총파업 강행 방침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4월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차현정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 사측의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평상시 유지'의 법적 의미를 둘러싼 해석 충돌이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영권 존중'을 언급하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고 노사간 두번째 사후조정마저 19일로 연장되는 등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각종 변수가 복잡하게 얽히는 양상이다.

### ◆가처분 일부 인용, 무슨 의미인가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은 삼성전자가 신청한 4가지 항목 중 3가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안전보호시설 유지, 웨이퍼 변질 방지 보안작업, 시설 점거 금지가 인용됐고 조합원 파업 참가 호소 과정의 협박 금지는 기각됐다. '일부 인용'은 파업이 일부만 제한된다는 뜻이 아니라 신청 항목 중 일부가 받아들여졌다는 법률 용어다. 다만 안전보호시설·보안작업에 해당하는 인력만 파업이 제한되고 일반 제조·관리 인력은 여전히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

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치·폐지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노조 측은 법무법인 마중 의견서를 통해 '평상시'가 인력이 적은 '주말·연휴' 수준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파업 기간 중 투입해야 할 인력이 최소화된다는 논리다.

이에 사측은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며 "노조 측 주장은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평상시란 평일이든 주말이든 그동안 해온 방식 그대로 작업하라는 의미"라며 "노조의 주말·연휴 기준 해석은 틀렸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도 "평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취지는 평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을 가동하고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다만 안전보호 관련 인력의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 ◆총파업 강행·긴급조정권 충돌할까

노조는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 측은 "가처분 일부 인용으로 쟁의권이 일정 부분 보장됐다"며 "예정대로 쟁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직원 중 안전보호시설·보안작업 담당 인력은 전체의 5~10% 수준으로 알려져 파업 기간에도 근무해야 하는 인원은 1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예상하는 총파업 참여 인원이 4만 7000여명인 만큼 약 8000명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약 4만명은 파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사측 입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최악의 상황만 피한 것"이라며 "공급 차질과 생산 손실 우려는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확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SNS에서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헌법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으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우려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동하는 제도이다. 발동과 동시에 노조는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30일 조정 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노위 중재 결정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역대 발동 사례는 지난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이후 네 차례로 모두 조선·항공 등 국가기간망업종에 한정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노조가 가처분 결정에도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 ◆경제단체·주주 한목소리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반도체 수출액은 국가 전체 수출액의 약 37%를 차지한다"며 "파업이 강행될 경우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의 약 25%를 차지하는 1위 기업으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코스피 지수 전체의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경련 대한민국의주주운동본부 대표도 이날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이익 연계 성과급 제도화 협약이 체결될 경우 이사회 결의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성과급 명문화가 현실화하면 사측 이사회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노조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긴급조정권 써도 끝까지 간다", "100조 적자나도 끝까지"와 같은 강경 발언이 등장하는 가운데 "중국으로 기술유출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삼척수(삼성전자 혁명 수준 요구)"라며 노조를 비판하는 글도 쏟아지고 있다. 주주·비조합원 직원들을 겨냥한 감정적 비난과 노조 비판 글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사내외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경제계 "삼성전자 파업 현실화 땐 긴급조정권 필요"

경제6단체, 공동성명 내고 철회 촉구  
"국가 핵심 산업 근간 흔들 우려"  
반도체 수출·무역수지 악화 지적  
협력업체·소부장 생태계 연쇄 타격



삼성전자 사초 사옥.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계가 파업 계획 철회와 상생 협력에 나설것을 강조했다.

경제계는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면서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

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노조가 기존 입장만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한 것에 깊은 우

려를 표한다"며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들는 것으로,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파업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 경제와 산업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경제계는 올해 반도체 수출액이 국가 전체 수출의 37%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약 45조의 성과급 규모는 지난해 전체 주주 배당금의 4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투자 여력과 미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결정적 시기에 감행되는 대규모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기회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파업 강행 시 생산 차질로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경제계는 삼성전자의 노조의 대규

모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기회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반도체 공정 특성상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설 경우, 웨이퍼 대량 폐기와 장비 손상은 물론 그로 인한 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파업 피해가 삼성전자 내부에 그치지 않고 수천 개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



## 李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 상호양보 촉구

삼성 최후 협상 앞두고 SNS 메시지  
노동권·경영권 동등한 존중 강조  
"연대·책임으로 함께 잘 살아야"

한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한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헌법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양자만큼 음자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過猶不及 物極必反·지나침은 미치지 못하고 같다,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간다)이라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 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겠다"고 말해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청와대에선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국민 모두 공생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원칙적인 말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노동권과 경영권 모두 동등한 권리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노사 간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제한 헌법에 포함됐다가 삭제된 '기업 이익 균점권'을 언급한 것은 노동자 측 주장에도 역사적 근거가 있는 것이라며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을 언급한 것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언급한 '긴급조정권' 발동 등 정부의 대응 가능성도 시사한 셈이다.

앞서 김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김 총리 대국민담화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아직 대화의 시간은 남아 있다"고 말을 아꼈다. /서예진 기자 syj@

